

“공직자 징계부가금 1위, 청렴도 전국 꼴찌 이유 뭔가”

전남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전남도 국감에서는 전남도의 낮은 청렴도와 비리 등에 의한 징계부가금 1위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무안공항 활성화,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F1 대회 사후 대책 등도 언급됐다.

전남도 국감을 맡은 안행위 소속 의원은 국감 반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정용기·서정원·신의진·이예리사·황인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문희상·박남춘·유대은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서정원·신의진 의원은 불참했다.

박남춘 의원은 2010년 3월 22일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전남도의 징계부가금이 63억495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1위, 체납액 역시 62억4426만원으로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가금의 대부분인 61억5000만원은 지난해 불거진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비리사건’에 따른 것이다. 징계부가금제도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부가금은 126억2391만원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남이 최근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자치체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방공무원 1000명당 징계 현황을 따져보니 전남도가 지난 2013년 1000명당 13명으로 1위, 지난해 11명으로 3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

F1대회 위약금 등 사후 대책

호남고속철 무안 공항 경유

상수도 누수 개선 촉구

李志사 직접 도정보고 눈길

한 상태”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난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등 3년 연속 최하위였다”고 질타했다.

황인자·정용기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의 낮은 청렴도, 반복되는 전남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을 문제 삼았다.

김동철 의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호남고속철 경유, 전남북도가 추진중인 새만금국제공항, 호남고속철의 제주 연결, 광주군공항 이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를 통해 새만금공항을 추진중인 전북의 항공점진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남고속철은 제주까지 연결돼야 하며, 무안공항을 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가백년대계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군공항은 전남의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예리사 의원은 이날 전국 최고 수준인 상수도 누수율(25.3%), 110명으로 전체의 8.3%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F1대회 위약금 및 경주장 활용 낮은 수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례적으로 원고 없이 직접 주요 도정 보고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 업



6일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열린 가운데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무보고는 통상 기획조정실장이 하는데 피감 기관장이 직접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지사는 인구, 도민안전, 일자리·투자 유치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전남도의 여건과 새로운 변화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후배 국회의원을 앞에서의 ‘보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은 어느 곳이든 살

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몸부림의 효과가 나타나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한다”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비수도권 내부에서 지방 상호 간의 격차는 커진 만큼 지방회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감 이슈

지역발전특별예산 영남 편중 심화

산업거점기관지원예산 대구·경북이 40% 차지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가 영남지역에 편중돼 정권 차원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예산(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남 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지특회계 8523억원 중 대구가 11%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 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7.6%) 순이었다.

사업별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지나쳤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원과 396억원 등 무려 875억원이나 배정돼 총사업비 2212억원의 39.6%를 차지했다. 광주는 237억원, 전남은 214억

원을 배정받았다. 박 의원은 이 부문에서 대구와 경북이 수년째 이에 독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부문에서는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원, 경남 173억원, 대구 107억원 등 이들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광주는 40억원(4.6%), 전남은 83억원(9.5%)에 그쳤다.

영남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북 990억원(11.5%), 대구 906억원(10.5%), 경남 784억원(9.0%) 등으로 상위권이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 지원 예산은 636억원(7.4%), 전남은 729억원(8.4%)이었다.

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 차원(예산)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찰 내부 성희롱·성추행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하라”

전남경찰청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심리를 끼쳤습니다. 피해 여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6일 오후 열린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순천경찰서 성폭력 담당 경찰관의 자살이 담당한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를 예견한 듯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백 청장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뒤 거짓말탐지기 등 보강수사와 강한 징계 후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경찰차 법규 위반 이유 추궁

교통단속 앞서 예방활동 촉구

감사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가 뺨을 맞고 팔에 멍이 들었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유사 사건의 경우 영장 기간 사례가 많은지 등을 따졌다. 정 의원은 또 “성폭행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기강해이에서 비롯된다.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사로운 사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유사 사례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전남 경찰관 223명이 징계처분됐다”며 “특히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고 있다. 경찰 내부 성희롱·성추행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강도 높은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예리사 의원은 “경찰관 성폭행 사건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며 “단계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전남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무인단속 적발 건수가 2010년 201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4년

사이 36% 증가했고, 전국 평균 위반율이 19.1% 인데 전남경찰은 30.3%로, 광주경찰청(32.5%) 다음으로 위반율이 높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경찰의 경범죄 및 교통법칙금 부과 규모가 2012년 630억원에서 2014년 1385억원으로 2.2배 늘었다. 전남의 경우에도 2012년 18억8000만원 수준이던 교통법칙금 부과 규모가 2년 만인 2014년에는 33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세수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합정단속 등 대신 사고다발지역 분석 등 예방과 제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상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천라남도 보성군 조생면 조생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